전국승려대회, 경과와 현황

1.21 전국승려대회


개신교 선자의 방화로 불탄 수진사

불교종단협 종교편향 훼불 저지 결의

해미읍성 국제성지화 본격화

정청래 의원 불교폄훼 발언 항의



불자들의 릴레이 규탄 시위


캐럴캠페인에 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항의



더불어민주당사 항의 방문



불교왜곡 규탄 현수막

거세지는 규탄 여론… 승려대회 역량 집중

정청래 의원의 폄훼발언 등
지난해 연이은 논란 기폭제
신행·포교단체들 잇딴 성명

종단협 등 대책조직 구성도
각 조직들 승려대회 계기로
대응 위한 총결집화 이어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각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종교편향 · 종교차별의 피해자는 대부분 불교였다. 불교계가 그동안 종교갈등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 온 대표적인 종교로 인식돼 온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후 7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교계 화두는 종교편향이다. 이는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의 완전 종식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승려대회는 사실상 지난 한해 개별 사안으로 분산된 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여론의 결집이다. 불자들의 상처와 불편함이 분노로 바뀌고 규탄의지로 귀결된 일련의 과정을 톺아봐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편향 · 차별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불교계의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20년 남양주 수진사가 개신교신자의 훼불로 소실된 시점부터로 확인된다. 지난세월 수십여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해 왔지만, 이례적으로 개신교계의 배타적인 신앙으로 인한 불편함이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훼불사건은 일부 왜곡된 신념을 가진 개인의 일탈로 치부된 경향이 있었던 반면, 수진사 사태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돼 온 사찰 방화의 근절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신교에 대해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니라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21년 2월 이사회에서 회원종단서 발생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종단협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진정한 종교평화 확립을 위해서는 인내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올해 대선 ·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종교편향 예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사무소, 소속 당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변화가 이는 동안 국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논란이 제기됐고 주어사 · 천진암 등 국가예산이 투입된 가톨릭 성지화 사업에 대한 심각성도 재차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미 수년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지만 저지하거나 개선되지 못한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발언이다. 조계종은 11월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출범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재하고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종책모임 대표단, 호계원장 보광,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봉선사 주지 초격,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비롯한 불교왜곡과 종교편향 사안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결의했다.

곧이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정부가 특정종교음악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의 편향적 행보에 대한 불교계 분노에 불을 당겼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법적 조치에 나섰고 성난 불심은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전통문화 홀대 논란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상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증액안이 최종적으로 삭제 혹은 대폭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수차례 반복된 종교편향 논란과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등으로 불교계 공분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느끼는 소외감과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각 신행 · 포교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국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범종단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결과물인 셈이다.

1월 21일 승려대회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매주 '정청래 의원의 종교폄훼, 불교왜곡 망언에 대한 항의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과 정청래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월 27일까지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월 6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고 "불교 폄훼, 종교 편향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스님과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항의 서한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에 이어 전국 사찰의 행보도 눈에 띈다. 조계종 제16대교구본사 고운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 막말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종교 편향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전국승려대회에 제16교구 본 · 말사 스님 전원 참석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화엄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은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 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불교계 여론이 총결집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향후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정부 주도 국가조찬기도회 시작

박정희 정부(1961~1979)

개신교국가를 노골적으로 지향했던 이승만 정권 때 뿌려진 씨앗은 박정희 정권 때 폭발적인 교세성장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기간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를 통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개신교계는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는데, 1965년 2월 시작된 '국회조찬기도회'는 이후 매주 기도회를 가졌으며 "입법과정에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언하고 있을 만큼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개신교 교회의 국회 창구' 역할을 자임했다.

1966년 3월,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3부 요인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첫 모임을 가지며 아시아 최초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됐다. 제1회 대통령조찬기도회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과 개신교계인사, 정계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개최됐으며 이어 1974년까지 매년 5월초 연례행사로 계속됐다. 조찬기도회에서는 매번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가 행해졌고 정치권에 대한 종교적 찬양이나 축복, 반공 메시지가 주종을 이뤘다.



1974년 5월 1일 열린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